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기자회견문] 2016. 11. 17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Telephone 02-739-7285 · Facsimile 02-735-9400 · http://media.nodong.org

청와대의 KBS 인사개입, 방송 통제를 고발한다!!

- 사장 선임 플랜 실패하자 이사장 교체, KBS 장악 및 새 사장(고대영) 선출 의혹

박근혜의 청와대가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KBS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지시 등 꼼꼼하게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한 전 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는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넉 달동안 17번에 걸쳐 KBS의 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메모가 담겨 있다. 김영한 수석은 2014년 6월12일 민정수석에 내정된 이후 정식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각종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이 남긴 KBS 메모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KBS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 청와대가 새로운 KBS 사장 선임과정에 전면적이고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 자료 제공: TV조선)

☞ 6.16 메모 中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

☞ 7.4 메모 中 'KBS 이사 우파이사-성향 확인 要'

특히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비난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의혹마저 엿보인다.

☞ 7.11 메모 中 '면종복배', 'KBS 이사'

실제 2014년 8월27일 이길영 당시 KBS 이사장은 갑작스럽게 이사직을 사퇴했는데, 이 전 이사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새노조 측에 최근 밝혔다.

이 밖에도 KBS 새사장 선임 과정에서 새노조와 각 협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를 결정하고 이를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관철시킨 의혹도 담겨 있다. 또한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보도와 관련한 방통위 중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서 KBS 측이 승소하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들에게 방통위원장을 통해 항소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담겨 있는 등 KBS 사장과 이사 선임 및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 심지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대한 동향을 체크해 온 흔적도 보인다.

이처럼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온 만큼-이미 이정현 전 수석의 KBS 보도 통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현 KBS 이사장과 사장 등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 대상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인사개입과 방송 통제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현재 발의중인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들을 국회는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논의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3. 현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은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전 논의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만큼 당시 청와대가 어떤 요구와 압력을 가했는지 즉각 자백하여야 한다.

4. 박근혜의 청와대와 고대영 사장은 지난해 KBS 사장 자리를 놓고 짬짜미나 청탁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진실이 폭로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